

전북특자도 출범 도민인식 조사 관련 토론회

'전북인이라는 자긍심 갖자'

(사)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2023년 전북도민인식조사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도민인식조사에는 일반도민 대상 ARS 764명, 기업인 공무원, 애향장학금 수혜자 대상 전화면접 100명 등 모두 864명이 조사에 답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정 총재를 비롯해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정희 센터장, 전주상공회의소 윤광섭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전북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토론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전북애향본부는 전북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해 삶과 정주여건, 현안 등을 살펴보고 지역 발전의 조건과 개선과제,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사는 4년 만에 실시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미있는 진단과 대안이 제시될 것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동영상으로 보내 온 축사에서 "전북애향본부의 도민인식조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기업유치,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우리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있다"며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도민들의 역량을 한 데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참석자 서거석 교육감은 직접 단상에 올라 3가지 말을 전했다.

먼저, '전북인이라는 자긍심을



전북애향본부 주관으로 열린 전북도민인식조사 관련 토론회가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도민들, 특자도 출범 미래 전망에 '긍정적' 정치권·행정 힘 합쳐 도민 역량 강화 필요

찾으면서, 전북대 총장 재임기간 중 전북대를 전대로 불리도록 한 일화를 소개해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두번째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민족도에서 보는 전북도민인식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주관적 소득수준(통계청 2021년)을 5점 척도 분석하면 전국 평균은 46.6점 수준이고 전북은 50.4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민대상 만족도 조사의 5점 척도 100점 환산, 만족도는 '전북지역 거주 만족도'가 66.4점,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망'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재생활 만족도'는 62.5점, '미래의 전북전망'은 62점으로 조사됐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

른 미래 전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힘을 합쳐 도민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지역의 자치단체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 전북지역에 특화된 특례를 발굴하는 방안 등에 도와 시군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전북애향본부가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권혁남 전 전북연구원장의 사회로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소준호 정책마루 선우재 공동대표, 김명성 전 KBS 보도국장, 김영기 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김경철 (주)비바역 거주 만족도가 66.4점,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망'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재생활 만족도'는 62.5점, '미래의 전북전망'은 62점으로 조사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혁남 전 전북연구원장의 사회로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소준호 정책마루 선우재 공동대표, 김명성 전 KBS 보도국장, 김영기 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김경철 (주)비바역 거주 만족도가 66.4점,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망'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재생활 만족도'는 62.5점, '미래의 전북전망'은 62점으로 조사됐다.

/장은성기자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남형기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사진 왼쪽)이 면담을 갖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원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논의를 갖고 있다.

전북도, 특자도 지원위 회의 사전 논의

김관영 지사, 전북 방문 남형기 국무조정실 특자시도지원단장과 면담 "특화사업 발전·정부 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전북 역할 기회 필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7일 도청에서 국무조정실 남형기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과 면담을 갖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원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논의를 벌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지난 4월 18일 지원위원회 가동부터 지원위 개최를 애타게 기다려온 만큼 국무조정실의 더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특별자치도로서 무조건 권한 이양을 바라는 것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화사업 발전과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형기 단장은 국무조정실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윤석정 정부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고 화답했다.

이번 국무조정실 전북 방문은 7월 13일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앞서 사전 방문한 것으로 전북특별법 특례에 포함된 주요 현안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사전 답사를 토대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현장 방문지가 결정되며, 특례에 왜 필요한지, 현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전북자치도추진단 간담회에서는 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과 마주 앉아 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준비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발전전략'에 대한 점검과 애로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현재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3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국무조

에서는 194개 제도개선 과제 형태로 소관 중앙부처에 의견조회 중에 있다.

도는 국무조정실 의견 조회에 맞춰 지난 21일까지 4차 부처 활동을 마쳤으며, 7월말까지는 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활동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부터 비전 설정, 특례발굴, 개정안 마련까지 분초를 쫓아 달려왔다"며 "이제 전부 개정을 위한 첫 단추인 지원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게 시작할 만큼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협력해 남은 입법 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7월 3일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과제인 만큼 제주, 세종, 강원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모여 고도의 자치권에 기반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훈 기자

탄소중립·지역목재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박용근 도의원 대표발의 목재 지속가능 이용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산림분야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및 지역목재산업 발전에 선순환 구조 확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북도가 △지역목재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과 지역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해 목재제품 프로그램이나 목

공에 경진대회 등의 행사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북도가 목재나 목재제품 구매 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나 지역목재를 우선 구매하고, 공공기관에 지역목재 우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용근 의원은 "탄소저장 기능을 가진 목재의 이용을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순환경영 활성화와 지역 목재산업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열악한 하수급 업체 보호

오창숙 남원시의원 발의 조례, 시의회 통과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이 제 259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경제기반이 열악한 하수급 업체를 보호하는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업체와 남원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권장, 지역건설산업의 하도급 비율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대형 건설사 원수급인으로서 남원시의 관급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남원 지역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2021년 말 기준 남원시 관내 138개 종합건설업체에 종사하는 622명의 노동자, 1,369개의 전문직별 공사업에 종사하는 2,857명의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대형 건설업의 횡포와 하수급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설움과 제 배 지급되지 않는 공사대금과 임금체불 등 수많은 반복되어 온 나쁜 관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오창숙 의원은 "관련 상위법에 서 보호하고 있으나 남원 실정에 맞는 조리가 없었던 만큼, 남원 실정에 맞는 시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시의회 의원들, 정례회서 시정질문 잇따라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 28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위해 시정질문을 펼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이도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과제, 개인 인적 자원 확보 능력 △시정 주요 정책의 연속성 △정읍시 종합행정도 향상 방안 △하수처리시설 현황과 개인 하수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 △영조물 배상보험 공공시설 관리 수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서항영 의원은 △석면 유해성과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교육 및 홍보



△조경석 등에 대한 석면 검사 △석면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 공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상철 의원은 △보조금 부정 사용 방지 대책 및 부정 수급 단체에 대한

대응 △보조금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 △투명한 보조금 관리 지침, 매뉴얼의 수정,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고 이상길 의원은 △혁신도시 선정이나 공공기관 유치 노력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 실패 원인 및 향후 추진 대책 △제2의 혁신도시 유치사업 결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대한 대응책 △공공기관 유치전략 및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 및 2022 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하고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지자체 관련 김제시의회 결의안 규탄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특별지자체 단체 추진 관련 김제시의회 결의안'을 규탄했다.

김제시의회가 지난 22일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행정구역을 김제시 관할로 해야 한다고 소유권을 강조하며 전라북도가 제시한 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에 대해 규탄·결의한 것과 관련,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을 빼앗아 버리는 명백한 획책이며 도발행위(소유권 주장)라며 이에 군산새만금신항와 동서2축 도로 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하여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또한,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하지는 전라북도의 권유와 협약서 강요는 들사부략'과 진배했다"며 이를 밀 실행정과 자치권 농단행위로 규탄하는 한편, 김제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전북도의 행정을 용인할 수



없다고 성토했던 것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가 발표한 결의문은 극단적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전북도의 지역상생을 위한 추진 절차를 전북도의 자치권 도정 농단이며 갈등 극복과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을 비하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는 "도대체 김제시가 오 늘날의 새만금이 만들어지기까지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다"며 "새만금은 그동안 소외당했던 전북도와 군산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

해 군산시 소유의 땅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기회의 땅이며, 희망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새만금신항은 관할권 분쟁의 대상도 아니며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개발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발권과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하며 또, 신항이 접해있는 두리도 비안도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산새만금신항 역시 군산 관할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은 엄연한 군산 땅으로 김제시는 무모한 소유권 도발 행위를 당장 멈출 것 △전북도는 김제시의 선 관할권 주장과 분쟁으로 얼룩진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명확히 중재할 것 △새만금통합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공개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선관위 관련 주장으로 새만금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지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김제시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군산=김판관 기자